

광주 민·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13일 열린다

3년여만에 재개... 국무1차장 주관 '이전 반대' 무안군 불참의사 밝혀
이전사업 조율 위한 방안 등 모색
광주시 "정부차원 논의 재개 의미"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논의가 3년여만에 재개된다. 다만 군공항 이전 후보대상지인 무안군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광주 민·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전

후보 지역인 무안군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해왔고, 다른 이전 후보지는 포함되지 않아 범정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범정부협의체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으로 구성됐다.

무안군이 최종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범정부협의체 실무논의는 진행할 계획이다. 국무1차장이 주관하고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전남도 행정부지사, 국방부 군공

항이전사업단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행안부 차관보 등이 참여한다.

범정부협의체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 등이 모색된다. 정부 주도의 광주 민·군공항 이전 논의는 지난 2021년 5월 21일 회의가 열린 이후 3년 6개월여만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군공항 무안 이전을 위해 소음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지역민 설득에 나섰다.

광주시는 범정부협의체가 재개됨에 따라 공항 이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보고 무안군민에게 직접 홍보하는

열린대화방 운영과 이달 초 예정했던 '공항도시 무안 미래비전 토론회', '여론조사' 등도 중지하기로 했다. 또 논의의 틀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 확대된 만큼 '12월 데드라인'도 철회했다.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상생발전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상생발전 TF(가칭)를 구성해 민·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상생TF는 당 대표와 광주시장 위원장과 전남도당 위원장이 포함돼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연구도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안군은 광주민·군항 또 다른 이전 후보지였던 함평군과 해남군, 고흥군 등도 범정부협의체 참석을 요구하며 이번 회의에 불참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안군이 불참했지만 정부차원의 공항이전 논의가 재개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정부가 무안군을 설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대통령실, '연말 전향적 소비 진작책' 검토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대통령실이 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연말연시 '전향적 소비 진작' 대책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연말연시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며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미국에서는 연말 소비나 카드사용대금은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 연말에는 그동안 못한 소비를 해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연말연시에 집중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세법 개정 사안이라서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반기 초과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

이밖에도 휴가비·숙박비 지원, 소비쿠폰·상품권 발행,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연계적으로 포함되는 내수 진작 대책도 발표될 수 있다.

한편 은행권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연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은행권의 자율적 취약계층 금융 지원 정책을 유도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올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약 2조1000억원(이자 환급 1조 5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자율 프로그램 6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지원한 바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북구, 노후 임대주택 외관 개선

북구, 노후 임대주택 외관 개선

북구, 노후 임대주택 외관 개선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정수미 LH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주민 등이 3일 북구 각화 주공아파트 1단지 일원에서 '각화 Change-Up 준공식'을 갖고 운동 시설, 휴게공간 등을 둘러보고 있다. Change-Up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단지 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나건호 기자

박수기 시의원 "광주시,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에 우려"

광주시가 내년도 기업 컨설팅 예산 전액 삭감 등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을 큰폭으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기(사진) 광주시의원은 지난 2일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이 큰폭으로 삭감돼 (사회적경제)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 중간 지원 조직으로 활동해 온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의 사회적경제 기업 컨설팅 예산 2억



2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마을기업 육성 분야도 1억4400만원이 삭감되는 등 지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 예산 125억원 중 내년 예산 74억원이 줄었다.

광주시는 그동안 중앙 정부의 예산 삭감에도 사회적경제를 살리겠다고 자체 보조 사업을 통해 '살림'에 용역 사업을 맡

겼다. 하지만 올해는 사회적경제 지원 컨설팅 업무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이관해 통합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인력 지원 없이 예산 3000만원만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이관하겠다는 업무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 지원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관련 업무를 폐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른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